

검 토 보 고 서

의 변	안 호
	제124호

2018. 12. 20.

건	명	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(회계과)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관련 조항(제95조)이 삭제되고(2016. 5. 29.) 「지방 회계법」 제50조에서 관련 조항이 등재됨.(2016.5.29.) 이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하고
-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책임관(개정 2017.3.30.)과 통합지출관(신설 2015.4.30.)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합하도록 정비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95조를 「지방회계법」 50조로 수정 (안 제1조, 안 제7조)
- 나. 명시된 회계 관계공무원(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 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)에 회계 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을 추가 명시 (안 제2조)

□ 검토의견

-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관련 조항(제95조)이 삭제되고(2016. 5. 29.) 「지방 회계법」 제50조에서 관련 조항이 등재됨.(2016.5.29.) 이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하고
-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책임관(개정 2017.3.30.)과 통합지출관(신설 2015.4.30.)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합하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변	안 호
	제125호

2018. 12. 20.

건	명	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	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	

보 고 내 용

☐ 제안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[일반회계]

○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취득

· 은진면 시묘리 산8-2외 1필지 7,736㎡(토지)

○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건물 증축 취득

· 취암동 516-8 552.72㎡(건물)

□ 검토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변	안 호
	제126호

2018. 12. 20.

건	명	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회계과)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보 고 내 용

☐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[일반회계]

○ 게이트볼장 토지 취득

- 양촌면 남산리 507-18번지 외 1필지 1,645m²(토지)

○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

- 연산면 청동리 127-27외 3필지 3,886m²(토지), 1,624m²(건물), 990m²(지장물)

☐ 검토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